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책대토론회

2015년 2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세미나실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주관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소장 전순옥

후원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 소상공인연합회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행사 순서 (프로그램)

### 1부 (1시 30분~2시)

### 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

- 국민의례
- 인사말      전순옥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소장)
- 축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회장  
              이봉승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병오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위원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 2부 (2시~5시)

### 정책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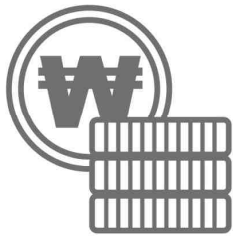
####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기존 정책의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

- 사회자      정태인 (칼 플라니 연구소 창립준비위원)
- 발표자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주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장)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이상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책대토론회



# 1부

## 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

● 국민의례

● 인사말

● 축사

전순옥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소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이봉승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병오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위원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전 순 옥**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전순옥입니다. 오늘 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지난 2014년 2월 21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자영업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소하였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1년 동안 동대문 메이드인코리아 마케팅 플랫폼 구축 토론회, 중소상인·대형마트 상생품목 연구용역 및 발표회,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입법화, 총 7차례에 걸친 소공인 집적지 방문 및 현장간담회, 소상공인 및 자영업정책 관련 국민여론조사 등 다양한 정책개발 및 지원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2014년 말 현재 소상공인은 555만,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할 경우 687만 명에 달합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 종사자 수로는 38%를 차지할 만큼 한국경제의 다수를 차지하고 서민경제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의 위험에 빠지고 체감경기가 날로 악화되면서 자영업의 위기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자리잡고 있는 산업생태계는 여전히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퇴직한 50대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을 통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레드 오션(Red Ocean)’으로 전락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소득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9년 근로소득이 223만7400원,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74만7200원으로 149만원의 차이를 보이던 것이 2014년에는 근로소득이 287만1700원, 사업소득이 86만2200원으로 무려 2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과 비교하면 10년만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격차가 두 배나 벌어진 셈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인데 이를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16만원입니다. 자영업자의 평균 사업소득은 법정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55만 소상공인, 687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희망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불황 시기 마다 자영업자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재탕, 삼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자영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존 자영업정책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창립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의 주제를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영업의 실태와 기존 정책에 대해 냉철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동시에, 사회정책, 사회적 경제, 공정경쟁 등의 관점에서 자영업의 구조재편 방향과 내용도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상공인정책, 그리고 자영업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생산하는 싱크탱크입니다. 또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집단, 정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정책브릿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플랫폼 역할도 담당할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소상공인의 생활현장에 밀착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것입니다.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소상공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기반을 확대하는데 복무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새누리당과 차별화된 자영업정책을 제시하고 ‘현장정당, 정책정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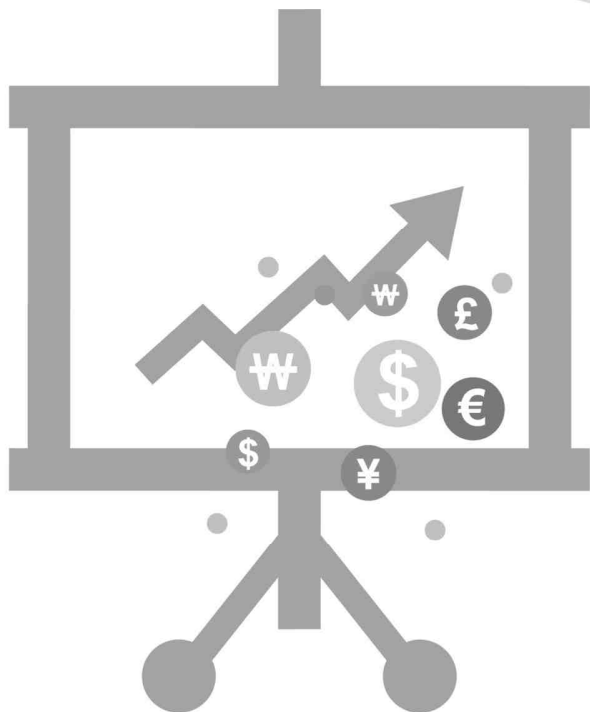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오늘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승용 의원님, 정세균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아주신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연구위원님, 사회를 맡아주신 정태인 칼 폴라니연구소 창립준비위원님,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산업연구원 주현 연구위원님, 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님,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소장님,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님, 중소기업청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자문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청중분들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 국회의원 전 순 옥



# 축사







**문 재 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입니다.

먼저, 우리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창립 1주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를 기념하는 정책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입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만 따져도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하지만 수출 지향의 대규모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변변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습니다.

새누리당 집권 7년,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영하 30도입니다.

MB정부 때부터 시작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탐욕도 끝이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재벌 대기업에 의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절반이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상공

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붕괴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상생과 동반 성장의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 서민경제를 지키겠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야당이 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정책 대토론회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살핍으로써,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소상공인정책연구소를 이끌며 소상공인 정책 개발에 앞장서 오신 전순옥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정책연구소가 대한민국 600만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는 싱크탱크로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15. 2.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 재 인**



**민 병 두**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민병두입니다.

먼저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성공적인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소상공인의 활동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연구 및 개발,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임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정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해동안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소상공인 정책개발 및 입법 마련을 위하여 여론조사 실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 위한 현장 감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도시형소공인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공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불황으로 인한 체감경기 악화 및 얼어붙은 취업시장은 청년 실업자 및 은퇴시기와 맞물린 베이비붐 세대를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게 함으로써 자영업 및 소상공인 생태계는 ‘적자생존’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또한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자영업과 관련한 정책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제시를 바탕으로 정말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개발의 밑거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민 병 두**



**김 동 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김동철 의원입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정책대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및 자영업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순옥 의원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 연휴에 만나본 재래시장 상인, 자영업자분들은 한결같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정책에서부터 강한 구조조정 드라이브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피부에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기불황, 경기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자영업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기존 자영업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오늘 토론회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보다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못지않게 자영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토론회인 만큼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할 다양한 정책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라며, 국회 산업위원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귀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과 함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운영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의원 **김 동 철**



**최 병 오**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최병오 위원장입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위상과 기능을 재확인하고, 소상공인관련 정책생산 및 메신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토론회 개최를 도시형패션소공인 발전협의회 회원단체와 함께 후원합니다.

‘도시형패션소공인 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2일 패션제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목표로 패션소공인 16개 단체들(의류, 주얼리, 수제화, 안경, 가발)이 모여 출범한 이래 공동 현안 문제 해결과 상호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산업현장에서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패션관련 제조업의 재도약을 스스로 이루어 보고자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계기도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출범과 이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전순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소공인들은 산업화와 함께 발전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여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소공인들의 몸에 축적되고 체화된 이 기술들은 소공인 개개인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신규인력의 유입단절로 노후화 되었다고 애

기 하시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이 자산들을 21세기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고 다듬어서 젊은 세대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접목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젊어진 기술로 우리 소공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전과 같이 소비재와 산업재, 그리고 초기·중간·최종 생산단계에 고루 분포하여 생산의 전 분야에 관여하며, 산업 구조 내에서 생산량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과 고용적 측면에서 완충 역할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연구소가 앞으로도 소공인 맞춤형 정책을 개발·제안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정책연구소를 이끌어 오신 전순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연구소로서 더욱 더 발전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위원장 **최 병 오**





인 태 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구체적 대안을 찾기 위하여

새정치연합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오신 전순옥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중소자영업자들의 운명이 벼랑끝으로 밀려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중차대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 지원한 국가 지원금의 규모가 1조10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매출은 11% 감소했고, 약 2조 5천억원의 매출 감소로 귀결되었습니다. 몇일전에는 유통재벌 신세계가 올해 3조 3500억의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투자처는 유통산업입니다. 최근에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초토화시킬 복합쇼핑몰등이 그것입니다. 3대 재벌 기업이 합쳐지면 10조 이상의 자본투자가 있을 예정이며, 사실상 중소자영업시장의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서 정부와 여당은 재벌규제의 해체를 넘어서, 유통재벌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7년은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일대 재난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박근혜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총체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바 비민주성, 무능력, 정책 실패 등 정치적 과오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들중 56%가 부자, 재벌 친화정책으로 정책공공성을 결여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불신과 불화는 일반 서민들에게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의 68%가 우리 사회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로 경제적 불안정이 66.7%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더욱 큰 문제는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구체적 대안을 세울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정부 기구,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나, 핵심을 치고 들어가 과감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언저리를 도는 파편적 대안들로 재벌과 그 비호자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견해가 있지만 저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정리하고,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보다 총체적 분석 그리고 주도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할 때 대한민국의 중소자영업자 문제 해결의 열쇠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재벌들의 독점욕은 중소자영업자들이 몰락과 소비시장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치 뱀이 제꼬리를 물어 뜯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마저 썩어들어가게 하는 자본의 욕망과 그에 포섭된 국가가 제 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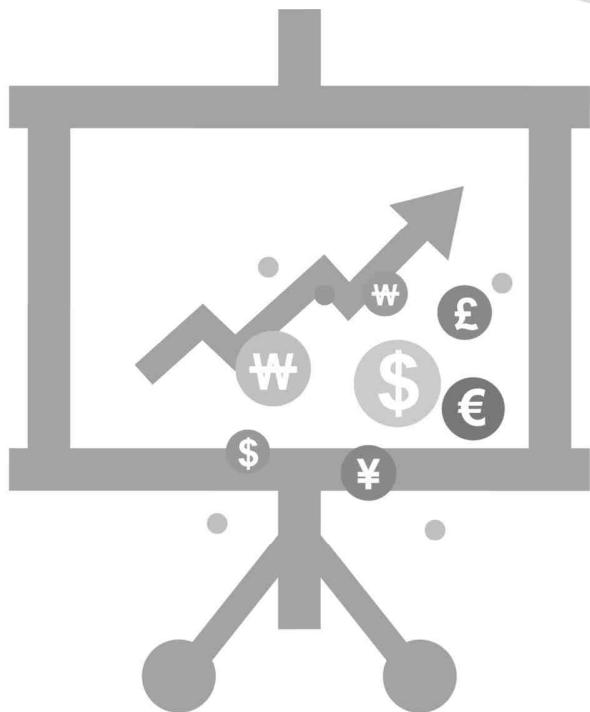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들은 현재 절망의 위기에 빠져 있으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다. 중소자영업들의 주체적 자각과 실천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방향이 우리의 희망과 한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2015. 2.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인 태 연

소상공인정책연구소  
2014년 활동 보고와  
2015년 사업계획





# I. 2014년 활동내역 및 평가

## 1.

###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목표와 활동영역

#### 1. 목표 및 지향

- 소상공인 실태조사, 전문가 및 관련 단체 간담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활동을 진흥하고 활성화하는데 목적
- 소상공인의 생활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개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당에 대한 소상공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기반을 확대
- 주기적인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차별화된 정책 개발을 통해 ‘현장정당, 정책정당’으로서 당의 위상을 강화

#### 2. 소상공인 정책 지원의 효과

- 튼튼한 가계, 양질의 일자리, 내수 활성화,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토대로서 소상공인 지원정책
-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의 계기로 작용하기 위해 과거 친기업 정책 → 기업이윤 증가 → 해외투자, 금융투자, 유보이윤 증가로 이어지는 부채의존형 경제모델을 넘어서야. 기업의 호주머니가 국민경제의 블랙홀. 국민경제 정상화는 노동자 임금인상과 소상공인 소득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

- 가계소득과 고용 증가 → 내수활성화 → 투자증가 → 고용증가 → 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 즉 소득주도 및 고용친화형 성장전략의 출발점
-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민생경제의 회복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지렛대로 작용

### 3. 연구소의 위상과 역할

-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정책연구기관
-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하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민생정책 생산센터, 이해관계자와 지식사회, 정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정보허브, 즉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연구와 정보의 플랫폼
- 이념과 성향을 공유하는 우호적인 직능 및 시민사회단체, 지식사회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과제 개발, 법률 및 제도개혁 방안 연구
- 소상공인 실태조사, 관련 세부 데이터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정보허브 →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의 정책 생산, 전문가 집단의 학술 진흥에 기여
- 부설연구소의 성격을 유지하여 당의 당면 현안 대응과 중장기 정책 개발을 지원
- 자문위원회 구성, 부소장 선임 등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당의 외연을 확대함
-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지식사회와 당(민주정책연구원)을 매개하는 정책허브 역할을 수행

## 1. 활동내역

□ 소상공인정책 관련 기관 업무보고 및 수 차례 자문단 회의(1월)

□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식 및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 21(금) /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주최 : 소상공인정책연구소

□ 동대문메이드인코리아 마케팅 플랫폼 구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3. 26(목) /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 주최 : 소상공인정책연구소

□ 동아시아미래재단 자영업자 대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5. 7(수) /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 주최 : 동아시아미래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 내용 : 700만 자영업자 살 길을 찾는다

□ 중소상인·대형마트 상생품목 연구용역 및 발표회

- 주관 :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소상공인·중소기업살리기 포럼
- 대형마트 상생품목제도 여론조사 발표와 입법 간담회(7월 15일)

□ 6.4 지자체 선거 소상공인 정책공약 개발 지원 활동(3~4월)

- 「도시형소공인지원법」 제정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공약 개발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50% 지원 등 관련 정책 입법화

## □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입법화 내역

- 2013.1.17.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 신년간담회시 도심형 소공인 지원의 필요성 제안
- 2013. 2.1. 도심형 소공인 정책 및 법안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 2013.2.19.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관련부서 및 전문가, 정책현황 및 법안필요성 검토  
관계부처실무자 협의회
- 2013. 3.26. '도심형제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13. 8.14. 도시형소공인 법안 전문가 스크린 및 자문회의(법안명 및 내용최종 점검)
- 2013. 9.26.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9월 26일 (목), 오후 2시 - 오후 4시/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참 석 자 : □ 주재발제 한정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좌 장 : 윤병섭교수 (한국벤처 대학교 경영학 박사)  
□ 토론자 : 남윤형박사(중소기업연구원), 김의승과장(서울시),  
조병선교수(숭실대), 이인섭과장(중기청), 장정건이사(한국의류산업협회),  
곽의택회장(한국소공인 진흥협회)
- 2013. 12.9.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법률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및 공동발의
- 2014. 4.13.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및 통과
- 2014. 4. 29.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본회의 통과
- 2014. 5. 2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 ('15년 5월29일 시행 예정)

## □ 가방집적지 현장 간담회(1/17)

- 중랑구 가죽 핸드메이드 가방 집적지 현장 방문 및 가방 소공인 대표자 간담회
- OEM 수준에서 벗어나 자체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업화지원 요구

##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주관기관 간담회(2/21)

- 서울지역 수제화, 의류봉제, 인쇄, 금속가공, 부산지역의 패션의류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대표자 및 실무자 간담회
- 2013년 특화지원센터 운영의 성과 및 애로사항 점검
- 2014년 신규 특화지원센터의 역할 및 제안
- 2014년 지원정책방향에 대한 개선안 및 효율적 정책 제안



#### □ 패션소공인 전문가 간담회(5/19)

- 패션의류 및 관련제품들 간의 협업 및 정부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관된 정책을 제안하고 일종의 정책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
- 도시형 소공인중 패션의류 및 관련품목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의 목적과 비전을 공유,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에 필요한 업계 공동의견 및 개선, 지원책 요구를 위한 자발적 협의체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창신동 패션의류 소공인집적지 현장 간담회(5/20)

- 도시형 소공인 업종별 집적지 현장조사 및 애로사항 수렴 목적
- 공동협업화 사업의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특화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 제안
- 안정된 일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구매에 소공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는 동시에, 정부 산하기관의 유니폼을 국내 소공인에게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요청

#### □ 문래동 소공인 현장 간담회(6/13)

- 문래동 정밀기계 가공 소공인 집적지구 두 차례 현장 방문
- 소공인진흥협회와 공동으로 현장답사
- 영등포구 환경과 협조, 공동화장실 설치 추진 등 작업환경 개선
- 박근혜 대통령과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소식 동행

#### □ 6대 패션소공인 연합회 발족식(10/22)

- 도시형 패션소공인단체 출범 및 패션소공인 산업별 현황 발표
- 패션의류봉제-가방-수제화-주얼리-안경-공예산업 등 6대 패션소공인 16개 단체의 협의체 출범식 및 활동계획 등 발표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정책 관련 국민여론조사(12월 첫째주)

- 소상공인 10개 항목에 대한 1000인 유무선 조사
- 여론조사의 결과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 2015년 사업계획 및 활동내용

## 1.

### 주요 목표

- 2기로 접어드는 2015년 소상공인정책연구소 활동의 안착화
- 소상공인 생태계의 내외적 네트워크의 주요 싱크탱크로서 기능 강화
-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 생산 및 메신저 역할 구축

## 2.

### 주요 사업계획

#### 1.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토론회

- 2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5시
- 1부(1시 30분-2시) : 1주년 기념행사(기념사, 축하)
- 2부(2시-5시) : 정책토론회(주제 : 자영업의 위기, 백약이 무효한가?  
새로운 정책대안의 모색)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세미나실

#### 2. 사회적 경제와 소상공인의 공존과 협력을 위한 기획토론회

- 소상공인단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들(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연구센터 및 사회단체 등)과 공동기획
- 정글의 법칙에 노출된 자영업과 소상공인부문을 창조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생태계조성과 지원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주요 주제로 설정

- 4월 말 예정

### 3. 민주정책연구원 ‘정책엑스포’ 소상공인 섹터 프로그램

- 4월 둘째 주 6~8일(월~수)
- 소상공인 관련 이해관계자 및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정책 의제를 소개하거나, 공동의제를 논의하는 정책박람회 성격
- 크게 정책부스(직능단체 및 사회단체 자체운영)와 기획토론회 중심으로 운영 예정
- 주요 프로그램 : 정책토론회, 참가단체 정책부스 운영

※ 예) 정책부스 가능단체: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산하 단체 및 협회  
〈정책부스 운영 사례: 한국의류산업협회〉

- 협회 소개: 현황 및 구성, 연혁
- 기존 활동내역 및 성과 소개
- 현안요구 사항: 한-베트남 FTA체결이 한국의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 예) 산업집적지별 특화산업 정책방안 및 특화지원센터 운영 방안 모색 토론회

### 4. 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 2-3개월 단위로 현안 이슈 중심으로 세미나 혹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컨센서스를 구축하고 당의 메시지를 전파

※ 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연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예) 소상공인과 소공인의 정책 분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5. 소상공인 실태 및 주요 의제 관련 연구사업 추진 및 정책토론회

- 소상공인 실태분석, 혹은 소상공인정책 관련 연구용역 추진
- 새정치민주연합과 지식사회를 연결하는 소상공인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진연구자 인재풀 형성 및 중장기 의제 발굴·제안

※ 예) 연구용역 : 소상공인 실태조사(2007/2010/2013년) 결과에 기반한 주요 정책과제 도출 및 적용방안 연구

※ 예) 연구용역 :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정책 평가와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연구

## 6.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소상공인 10대 핵심공약 및 50개 세부정책 시안 마련

- 내외부 정책전문가들로 TFT(6인 정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미팅 예정
- 2015년 3-8월 가동 예정
- 소상공인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소의 주요 임무이지만, 정치적 의사 분출과 이슈 전달력이 강한 선거국면을 준비할 필요성
- 당 정책위 및 민주정책연구원과 연계하여 기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맞춤형’ 10대 공약과 50개 세부정책을 개발하고 발표 예정
- 각 시기별 현안자료 배포 및 10월 정책대토론회를 통해 성과 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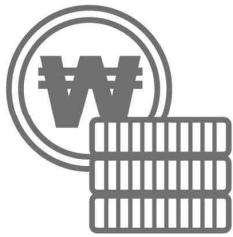
### 3.

### 주요 일정 및 예산 내역

#### 1. 주요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 의	○			○			○			○		
연 구 사 업		○	○	○	○	○	○	○	○	○	○	
정책토론회		○		○			○			○		
세 미 나 및 간 담 회			○		○		○		○		○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기존 정책의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



## 2부 정책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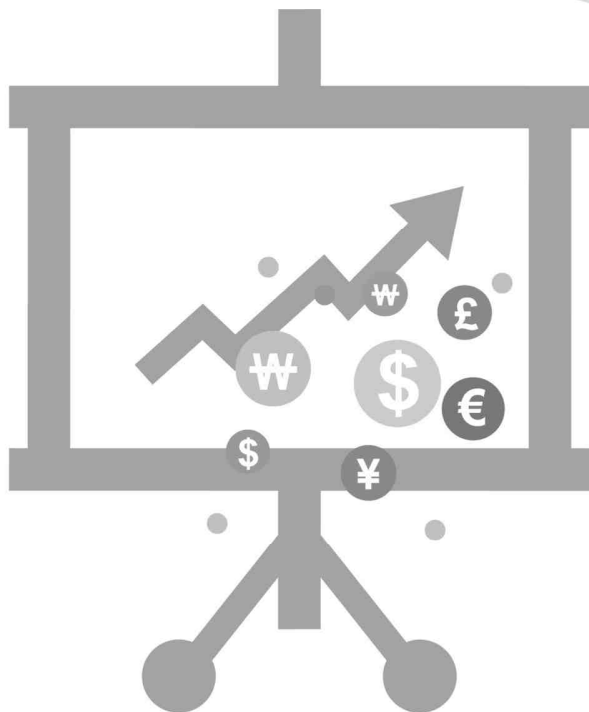
- 사 회 자 정태인 (칼 폴라니 연구소 창립준비위원)
- 발 표 자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자 주 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장)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이상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발 표

# 자영업 정책의 회고와 향후 방향



**K SBI**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전 인 우



## 요 약

- 최근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는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하반기와 비슷한 낮은 수준으로 자영업 부문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
  - 소상공인상인진흥공단이 조사한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2009. 1월 수준(38.7)과 비슷하게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급감하여 2014. 7월 45.4 기록하였고, 2014년 12월 현재 53.4 수준으로 2008년 하반기 수준
- 자영업 정책은 정책 효율성 및 정부개입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으며, 이 같은 정책점검을 통해 자영업 위기를 완화할 방안을 모색
  - 극단적으로 자영업 정책 무용론에서부터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 그리고 양극단 간의 어떤 점에 위치하는 정책추진 등이 바람직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
-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자영업 정책은 자금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교육·컨설팅, 상권정보, 협업화 등의 지원까지 확장
  - 1999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
  - 7. 7 대책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정책자금을 배분하는 기능에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지원근거 마련
  - 7. 7 대책은 1. 17 대책으로 이어져 상권정보 체계 구축, 창업교육과 자금지원 연계 프로그램 도입, 재래시장 종합지원을 위한 시장경영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
  - 2005년 5월 31일 『영세 자영업자 대책』 발표로 정책의 전환점 마련
  - 온누리상품권 도입, 나들가게 및 중소프랜차이즈 육성,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소공인 지원 등이 추가되면서 현행의 정책을 형성

■ 최근 들어 지난 수년간의 대책이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

- 9월 24일 자영업 위기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성장단계 지원 및 권리금 보호 대책 등을 마련

■ 자영업 평가 및 정책구성·운영상의 과제

- 성장단계에 따른 정책지원은 바람직하나 과반수를 넘는 쇠퇴기 이후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실행 및 확산 필요
- 자금·교육·컨설팅 등 기존 프로그램은 일정수준 성과제고에 기여하거나 성과악화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개선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필요
- 상가권리금 대책은 자영업자들이 구축한 영업권의 양성화라는 측면에서 자영업 정책의 또 다른 획

■ 정책추진 기본방향

- 정책설계와 집행단계에서 정책수요자들이 자생하려는 의지보다는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지 않도록 자영업 정책 수립 및 추진 필요
- 정책 사후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수단과 전달체계를 진단하고 환류(feedback)를 거쳐 정책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정책추진 주요 방안

- 자영업 고객의 신뢰강화를 위한 제품 및 자체 서비스 보증제 강화 :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및 협회·상인회 등의 차원에서 친철가게에 대한 점포선정 확대 등을 통해 고객에 대한 신뢰유지 및 강화
- 자영업 성장 동력 확충 : 혁신주도형 자영업자 유도 강화 및 고부가가치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확대, 자생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간접지원의 강화, 도시개발 정책과 연계된 전통시장의 혁신과 새로운 쇼핑공간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지원 강화

- 자영업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 협업컨설턴트·시장매니저 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서포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확충 및 내실화
- 자영업자 능동적인 세계화 확산 지원 : 전통시장의 글로벌 명품시장화 등과 같은 정책 이외에도 내수 중심의 자영업 사업구조를 탈피하여 세계화에 동참하는 자영업자가 배출될 수 있는 수익모델 개발
- 쇠퇴기 이후 및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 : 한계 자영업자의 자발적 구조개선 지원 강화를 통한 자영업 생태계의 정비 및 제도 확충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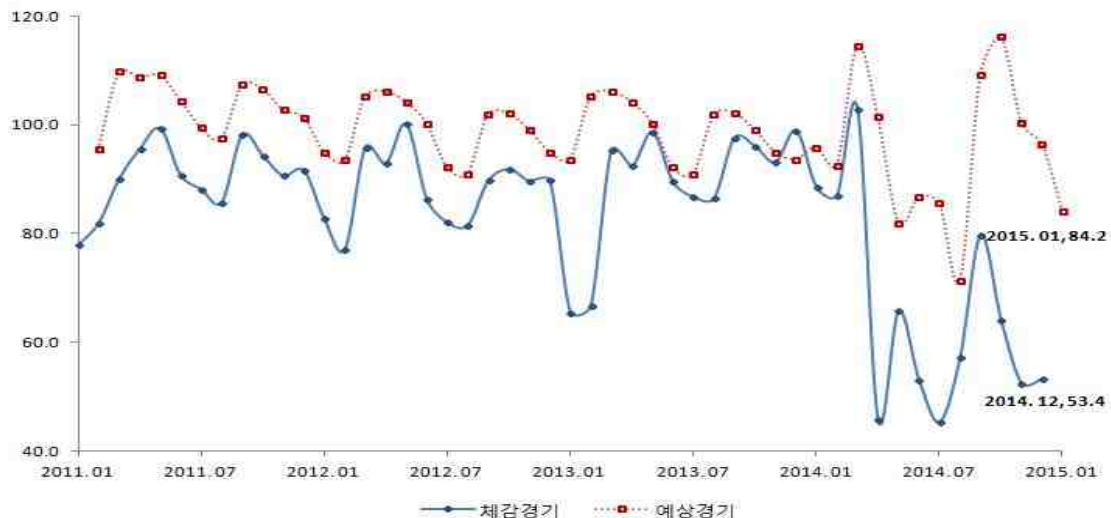
1. 위기의 자영업
2.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문제와 경쟁구조
3. 자영업 정책변천과 현황
4. 현행 정책의 평가와 과제
  - 가. 정책구성상 과제
  - 나. 정책운영상 과제
5. 앞으로의 정책 기본방향과 주요 추진방안
  - 가. 기본방향
  - 나. 주요 추진 방안

## 1. 위기의 자영업

■ 최근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는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하반기와 비슷한 낮은 수준으로 자영업 부문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sup>1)</sup>

- 소상공인상인진흥공단이 조사한 경기실사지수를 보면,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2009. 1월 38.7 수준으로 급감
- 이후 체감경기 회복 후 전반적으로 100 이하의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급감하여 2014. 7월 현재 45.4 기록하였고, 2014년 12월 현재 53.4 수준으로 2008년 하반기 수준

[그림 1] 소상공인 경기 체감 및 전망 BSI추이



■ '14년 현재 소상공인의 27%는 월평균 매출이 500만원 미만 수준이고, 부채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생존율은 업종간에 양극화가 심화

- 중기중앙회가 '14.12월에 전국의 주요 도시 500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액이 300-500만원 미만이 15.8%, 300만원 미만이 11.0% 수준<sup>2)</sup>
- '14.10월말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134조원으로 '10년말의 94조원에 비해 40조원 증가<sup>3)</sup>

1) 자영업자는 소상공인(근로자수 기준)과는 다른 개념이나 통상 소상공인 범위의 무등록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을 영위

2) '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액은 877만원, 월평균 영업이익은 187만원으로 '14년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63만820원에도 미달하는 영업이익 100만원 미만은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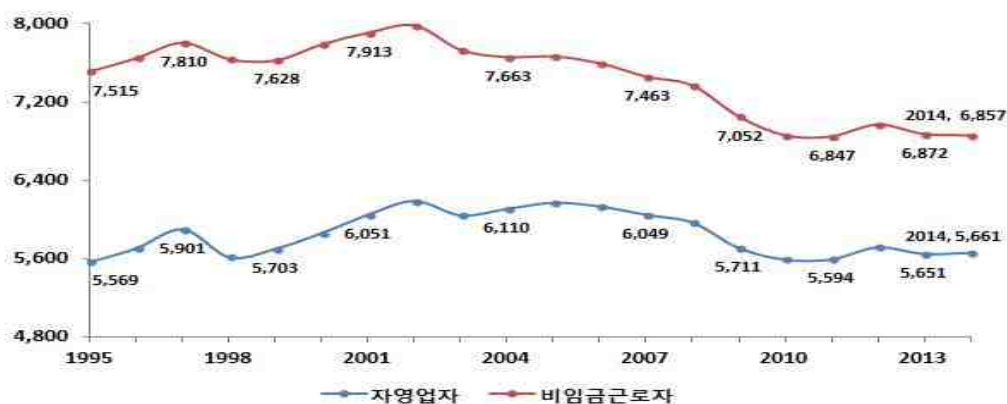
- 서울시의 경우 창업후 3년간 생존율은 편의점(84.7%), 자동차수리점(82.5%), 인테리어 (78.4%) 등은 높은 편이나 PC방(32.9%), 휴대폰매장(40.3%), 분식집(42.5%), 부동산중개업(47.3%) 등은 낮은 수준

■ 지난 12년간 전통시장 매출도 크게 감소하여, 최근 국회에서도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

- 2001년 전국 전통시장 총매출은 40조 1천억 원이었으나 2013년 20조 7천억으로 48% 감소했고, 전통시장 한 곳당 평균 매출도 2001년 279억 원에서 2013년 138억 원으로 50.5% 하락

[그림 2] 연평균 자영업자수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 자영업 부문 위기 원인은 경기요인도 중요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신규진입과 퇴로의 어려움 등에 있음

- 근로자 전체 차지하는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200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전산업 '91년 37.3% → '98년 정점 38.3% → '14년 26.8%)여서 과잉화 정도는 감소
- 그러나, 2002년 최고치였던 자영업자 수도 하락하면서 과잉화는 해소되는 듯했으나 2010년 이후 반등으로 과잉심화 재연 우려

3) 상당수 자영업자는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 이외에 가계대출로 잡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을 받고 있어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은행(2014)에 따르면 '14.6월말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370조원(개인사업자 대출 198.4조원, 가계신용 178.1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정



-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이직연령은 평균 53세(남자 55세, 여자 52세)로, 2010년 이후 자영업자 수 증가 및 50대 연령의 자영업자 비중 증가('09년 27.4% → '11년 30.0% → '13년 30.8%)는 50대 연령의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에 기인하고 있음을 방증

■ 자영업 정책에 대해 정책의 효율성 및 정부개입의 범위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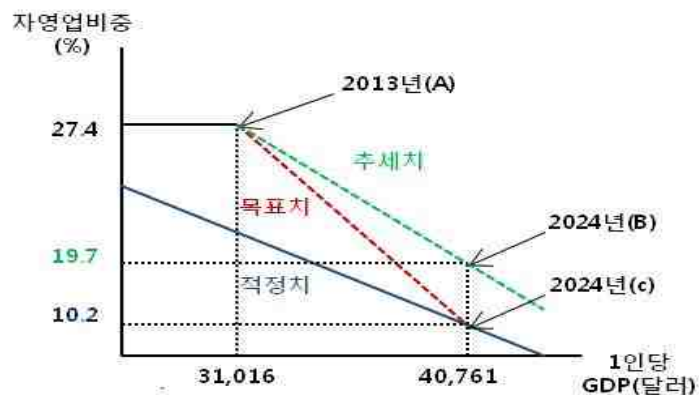
- 극단적으로 자영업 정책의 무용론에서부터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 그리고 양극단 간의 어떤 점에 위치하는 정책추진 등이 바람직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

## 2.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문제와 경쟁구조

■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은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과잉화 상태

- OECD 회원국의 1인당 GDP와 자영업 비중(근로자중 비임금근로자 비중)간의 관계는 [그림 3]과 같이 도출되며,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실질 GDP와 자영업 비중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식(1)상의 점들은 각 소득수준에 맞는 적절한 자영업 비중을 의미
- 2014년 현재의 경우 실제 자영업 비중(26.8%)은 2014년 적정치(15.2%)를 웃도는 수준이고, OECD 평균치가 가능한 2011년 자료의 경우 우리나라(28.2%)는 OECD 평균(15.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6.8%)·독일(11.7%)·일본(11.3%)·영국(14.0%)에 비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

[그림 3] 1인당 GDP와 자영업 비중의 관계



$$\text{회귀식 : } y = 33.92431 - 0.0005828x, R^2 = 0.3584$$

■ 우리나라에서 1991~2013년중의 1인당 실질 GDP와 자영업 비중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뒤인 2024년에 자영업 비중은 20%대 수준

- 우리나라는 출산율 둔화 및 고령화로 2013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하락되고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수 자체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
- 2024년에 자영업 비중 20%대에 도달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할 비임금근로자 수는 2014년 686만명보다 230만명 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추정

[표 1]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비임금근로자 추정치

연도	생산 가능 인구	취업자	비임금 근로자 목표치(%) : [그림 3] C점 도달의 경우			비임금 근로자 추세치(%) : [그림 3] B점 도달의 경우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2015	36,953	24,856	24.0	5,968	18,888	26.1	6,487	18,369
2016	37,039	24,938	22.5	5,604	19,334	25.4	6,333	18,605
2017	37,018	24,918	20.9	5,216	19,702	24.7	6,152	18,766
2018	36,931	24,835	19.4	4,817	20,018	24.0	5,956	18,879
2019	36,793	24,703	17.9	4,411	20,292	23.3	5,750	18,953
2020	36,563	24,484	16.3	3,996	20,488	22.6	5,526	18,958
2021	36,282	24,216	14.8	3,580	20,636	21.9	5,295	18,921
2022	35,987	23,934	13.2	3,170	20,764	21.2	5,064	18,870
2023	35,683	23,644	11.7	2,768	20,876	20.5	4,836	18,808
2024	35,313	23,291	10.2	2,368	20,923	19.7	4,599	18,692

■ 자영업 부문의 과잉구조의 인해 우선적으로 주변 소형업체와의 경쟁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경기요인을 제외한다면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자영업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 과잉된 자영업 부문에서 매출액이 감소된 이유로는 주변 소형업체와의 경쟁심화(41.8%), 경기침체로 인한 고객감소(14.6%), 주변 대형업체 출현(13.1%), 인터넷 또는 TV홈쇼핑(9.8%) 등 온라인업체와의 경쟁심화 등의 순[‘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 도매 및 소매업: 소형업체와의 경쟁(29.3%) > 대형업체 출현(24.0%) > 경기(11.9%)
  - 도매기가스 및 수도업: 대형업체 출현(23.5%) > 경기(17.6%) > 소형업체와의 경쟁(11.8%)

### 3. 자영업 정책변천과 현황

■ 외환위기 이후 1999년을 기점으로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됐던 소상공인 중심으로 자영업 정책 추진

- 1999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본격화
  -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당시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 7.7 대책으로 알려진 정부 정책을 통해 정부는 과거 정책을 보완, 소상공인 정책 기본 틀을 갖추면서 더 진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sup>4)</sup>
  - 특히 과거와 달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정책자금 배분하는 기능에서 창업 적성검사, 지역 상권분석 등과 같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
  - 200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의 지원에 대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지원근거 마련<sup>5)</sup>

[표 2] 5. 31대책 이전 주요 정책 추이

1999. 2	: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4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개시
2000.12	: 소상공인 지원 근거법 마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2001. 1	: 「지방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계획」 발표 (경제장관간담회)
2002. 1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7	: 「2010년 유통산업 발전전략(안)」 발표 (산자부 산업발전심의회)
2003. 5	: 「중장기 중소기업 혁신과 발전비전」 발표 (산자부 정책세미나)
2004. 3	: 「소상공인·재래시장 혁신대책」 발표 (중기청 대통령 보고)
7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7.7 대책)
12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5. 1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2개 정책과제」 발표 (1.17 대책)
3	: 시장경영지원센터 설립
5	: 「영세 자영업자 대책」 발표 (5.31 대책)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①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보강, ②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팅기능 강화, ③재래시장육성 특별법 제정, ④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확대, ⑤TV방송, 박람회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홍보촉진, ⑥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 지원전담팀 설치, ⑦재래시장 공동배송 콜센터 설치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 ⑧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 지원확대, ⑨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 ⑩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5) 동법은 2006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0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 7. 7 대책은 1. 17 대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조하고 자영업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
  - 특히 상권정보 체계 구축, 창업교육과 자금지원 연계 프로그램 도입, 재래시장 종합지원을 위한 시장경영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sup>6)</sup>
  - 구조개선 차원에서 자생력 확보가 가능한 업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도 추진되기 시작

## ■ 2005년 5월 31일 『영세 자영업자 대책』 발표로 정책 전환점 마련

- 1. 17 대책 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자영업자 정책과는 달리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5. 31 대책을 마련
  - 그간 자영업 정책 종합편이라고 볼 수 있는 5. 31대책은 자영업 부문의 과잉진입 예방,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영세한 자영업자들에 대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정책인 것으로 평가
- 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한 진입규제 문제로 5. 31대책에 대한 언론 비판이 있었지만, 현행 정책 윤곽은 5. 31대책 또는 이를 계승 발전시킨 실행방안에 기반

## ■ 현행 자영업자 정책

- 온누리상품권 도입, 나들가게 및 중소프랜차이즈 육성,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소공인 지원 등이 추가되면서 현행 정책을 형성
  - 2000년대 중반 이후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08. 3)」,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대책(’09. 4)」,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09. 10)」,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10. 5)」, 「소비자가 다시 찾는 전통시장 만들기 대책(’11. 1)」,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방안(’12. 2)」,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12. 9)」 등을 추진
  - 최근에는 빅 데이터, 공간정보 DB 등을 활용한 상권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나들가게 당일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 도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ICT화 등에 관심을 두고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대책」, 2013. 10. 7)

6)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①소상공인 밀집도 등 상권정보체계 구축, ②창업교육과 자금지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도입, ③소상공인지원센터를 종합컨설팅지원센터로 개편, ④소상공인 정보화 촉진, ⑤1만 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⑥영세자영업자의 업종전환 촉진, ⑦잠재능력을 갖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⑧상권활성화 가능성 등 재래시장 특성별 지원, ⑨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 설립, ⑩재래시장 공동처리시설 및 포장 용기 개발지원 등을 추진

- 그간 미흡했던 창의·혁신 기반 경영 확산, 중소기업 유통체계 개선, 소공인 특화 지원 강화에 중점
- 정부는 2015년부터 소상공인상인진흥기금 개편·운용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
  - 성장단계를 고려한 정책으로 개편하고 융자사업 다양화로 특화된 자금을 지원

■ 지난 9월 24일에는 지난 수년간 대책이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

- 자영업 어려움이 장년층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판단 하에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자영업자 핵심애로 해소 대책 등 종합대책을 마련
- 핵심애로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 보장,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인 자영업자 대항력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및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 지원 등과 같은 방안을 발표<sup>7)</sup>

■ 그 외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규제 실시, 유통업 분야 사업조정제도의 활성화 등을 추진

- ‘11년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
- ‘09년 후반부터 유통업 부문에서 크게 활성화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2년 이내 → 3년 이내), 사업조정 신청기간 연장(사업개시일 90일 이내 → 180일 이내) 등을 추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시 30일전 사전예고제 의무화

7) 권리금 회수는 사업정리 및 업종전환의 최우선(33.9%) 애로사항이고,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상가 권리금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거론

## 4. 현행 정책의 평가와 과제

### 가. 정책구성상 과제

■ 성장단계에 따른 정책지원은 바람직하나 쇠퇴기, 재도전 및 전환 단계에 대한 정책 강화 필요

- 쇠퇴기 이후 소상공인 성장단계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책 마련 필요
  -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쇠퇴기에 있는 점포는 47.8%, 폐업 및 업종전환 고려기에는 4.6%가 분포하나 재도전·전환 정책비중(예산규모)과 사업 수는 적은 상태
  - 쇠퇴기에 있는 사업체를 고려한 정책수단도 강화할 필요
- 성장단계에서의 기존 사업들 중 쇠퇴기에 적용 가능한 사업들을 구분하여 정책 대상 및 목표를 보다 명확히 추진할 필요
- 쇠퇴기 점포를 위해 자금과 같은 직접지원이 사업유지에 유효하겠지만 향후에도 점포를 계속 운영하려는 소상공인이 91.6%(점포정리 및 업종전환 예정 8.4%)에 이르고 있어 업종전환이나 재도전·자발적 사업정리 지원 등 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간접지원 강화 필요<sup>8)</sup>
- 전통시장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는 59.1%(쇠퇴기 55.2%, 폐업 및 업종전환 고려 시 3.9%)가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한 전통시장 단위의 정책 추진 필요
- 

### 나. 정책운영상 과제

■ 금융지원 효과에 대한 평가에는 이견이 있지만, 소상공인 성과제고 및 급속한 폐업방지 등에는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는 평가

- 2012년도 수혜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44.6%<sup>9)</sup>, 창업유지율 89.8% (전국사업체 창업 후 1년까지 생존율 83.3%) 달성<sup>10)</sup>

8) 기존 연구인 전인우 외(2005)는 소상공인 범위의 무등록사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2003년 현재 비농부문 자영업의 경우 180만 명 정도 과잉된 것으로 추정

9) 그 외에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자체 정책자금, 기타 금융기관 자금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매출증대(수혜업체 16.6%, 미 수혜업체 10.1%) 효과가 있고 매출감소(수혜업체 60.2%, 미 수혜업체 65.7%) 제동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

[표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14년말 계획)으로 본 현 정책의 구조

구 분	성장단계	예산계정 및 사업내용	비중(%)
용자 사업 (84.91%)	창업 전 단계	-	0.00
	창업초기단계	유망창업 소상공인 자금	8.49
	성장 단계	소공인특화자금, 창조형 소상공인 자금, 일반 경영안정 자금, 긴급 경영안정 자금	73.02
	재도전/전환	임대보증금 안심금융, 사업전환 소상공인 자금	3.4
보조 사업 (15.09%)	창업 전 단계	소상공인 교육(창업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1.39
	창업초기단계	신사업 육성 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0.56
	성장 단계	소상공인 교육(경영대학, 전용교육장), 중소기업 통합구매,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나들가게 성과 확산	4.04
	재도전/전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0.25
	전통시장	시장마케팅 지원(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홍보), 상인교육·시장관리(교육, 조직역량강화, 안전점검 등), 특성화 시장육성(문광형, 상권활성화, ICT, 장비기/배송서비스)	6.47
	지원인프라	정책조사연구, 기금운영	2.38

주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중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표에서 누락된 상태

- 2013년 수혜업체는 정책자금 이용 시 높은 신용보증 수수료(21.6%), 불충분한 대출금액(16.4%), 대출절차 복잡(15.6%) 등에 대한 불만 표출
- 일부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소액·살포식 지원으로 소상공인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비판
  - 평가시스템에 의한 선별과정 없이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선착순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우량 소기업 혹은 경쟁력이 없는 소상공인 이자비용 절감 수단으로 자금이 활용된다는 지적
  - 정책자금의 은행에서 대리대출 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과 연계하도록 하여 정책금융 중복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

■ 소상공인 교육은 양적 목표 충족, 교육방식 다변화와 개선으로 정책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교육효과를 보다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10) 전인우 외(2005)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창업을 통한 실업 해소에는 기여했으나 사업체 수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과잉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분석하고, 생계형 창업유도를 경계해야 함을 지적

-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는 소상공인 교육 매출증대(수혜업체 20.3%, 비 수혜업체 11.7%) 효과와 매출감소(수혜업체 56.1%, 비 수혜업체 63.4%) 제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sup>11)</sup>
- 2008~2012년 창업교육 수료자 대상 조사결과는 교육만족도 항목별로는 강사수준·열의(75.8점), 타교육 수강의향(73.5점), 교육시설·환경(70.5점), 교재품질(68.7점), 교육내용의 실질적 도움(68.2점), 교육기간 적절성(66.8점), 창업 시 필요한 내용제공(66.5점) 순이라서 교육의 실질적 효과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sup>12)</sup>
- 창업교육기관 평가 시 교육수료생 창업률을 성과지표에 포함하는 방식의 보완 필요
- 준비된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창업예방 목적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 필요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전문화 필요

- 2013년 컨설팅 수혜업체의 평균 월매출액은 컨설팅 이전보다 이후에 5.0% 증가 (1,561만 원 → 1,644만 원)
- 반면 컨설팅 전문성 부족, 미흡한 컨설팅 권고안 이행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 노출
  - 특히 컨설턴트 역량은 컨설팅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우선 개선 필요

■ 정보·인프라 지원인 상권정보시스템은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정확도를 높여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소상공인 방송의 정보품질 제고도 필요

- 상권정보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의 세밀한 수요에 적응해 미시적 개선 작업은 지속해서 전개되고 있지만, 각종 정보(DB) 정확도 제고가 필요
  -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정보 지원의 매출증대(수혜업체 23.2%, 비 수혜업체 12.1%) 효과와 매출감소(수혜업체 46.0%, 비 수혜업체 63.3%) 제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sup>13)</sup>

11) 소상공인 교육에는 과거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 이외에도 여경협 및 고용부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

12) 교육시간에 대해 낮은 만족도로 2013년도 실전 창업 교육시간은 기존의 80시간에서 130시간으로 증가하였고, 교육 효과도 개선



- 2006년 상권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상권 관련 각종 정보 및 부가서비스 확충으로 이용  
전수 증가(12만 명('06) → 60만 명 상회 예상('14))하였으나, DB 정확도를 무분별한  
창업예방을 위해 90% 중반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정부부처 간, 지자체, 기업과의 협력  
필요

- 소상공인 교육의 일환인 소상공인 방송의 효과는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증대(시청업체 13.1%, 미 시청업체 9.6%) 효과가 있고  
매출감소(시청업체 60.7%, 미 시청업체 67.4%) 제동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

- 소상공인에게 점포운영 개선 효과(64.7점), 점포매출 상승효과(63.7점)를 보다 높이기  
위한 정보품질(65.1점) 제고 필요

■ 협동조합에 대한 조직화·협업화 정책 경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교육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동업종간 조직화를 통한 공동사업에 치중하여 이업종 간  
협업사업 확산 필요

-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협업화  
지원이 본격화되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조합의 장점확대·단점축소를 위한  
교육을 통해 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 협업화 사업에 참여하여 설문에 응답한 조합원 402명의 경우 협업화 이후에 매출액이  
6.2% 증가

- 협업이 가능한 이업종 간 교류 및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범사례 발굴 또는  
만들기 등 필요

■ 전통시장에 대해 지원을 한 경우, 지원하지 않은 시장에 비해 총매출액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나 S/W 중심의 특성화 강화 필요

- 「2013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은 매출증대(실시시장 42.8%, 미 실시시장 10.2%) 및 매출감소  
억제(실시시장 22.4%, 미 실시시장 51.5%)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1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정보 지원에는 상권정보시스템 지원 이외에 컨설팅,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신사업 정보  
등을 포함

- 전통시장의 매출감소 억제효과에 힘입어 전통시장의 급속한 침체를 방지하는 데 기여
- 청년상인과 청년고객으로 활력(revitalizing)이 있고, ICT 기반의 전통시장 구조개선(restructuring), 대형마트와 SSM과의 차별화된 다양한 문화·디자인 시장특성화(repositioning)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추진 필요

■ 상가권리금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 교란 및 사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구축한 영업권 양성화라는 측면에서 자영업 정책의 또 다른 획

- 임차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행은 2개월이 지나거나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는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협력 의무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재산권 보호장치가 갖춰진 상태
- 그간 일부 임대인에 의한 권리금 갈취 및 동일업종 영위로 인한 권리금 분쟁 등이 문제가 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동 대책이 점포임대 대가로 임대료만 받는 정상적인 임대인 경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
- 임대차 기간보장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제한, 권리금에 대한 소득노출 회피방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대책의 근간이 마련되었으므로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필요

■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규제, 사업조정제도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영업규제에 대한 고등법원의 취소판결로 논란 야기

- 영업규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고 있으나, 영업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는 조사나 연구가 다수
- 사업조정제도의 효과로는 2013년 이후 SSM의 출점이 크게 감소하는 데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최소한 평균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중소기업의 시장잠식에 의한 매출급감을 완화시킨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서울고등법원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처분취소('14.12.12)로 인해 영업규제 문제가 다시 불거진 후 상반된 시각의 공방 상태

## 5. 앞으로의 정책 기본방향과 주요 추진방안

### 가. 기본방향

■ 생애주기 이외에 소득수준을 고려한 자영업 정책의 추진으로 정책대상을 세분화

- 최저생계비와 임금근로자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자영업 부문의 소득을 3단계로 구분하여 생애주기와 소득단계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정책지원의 효과성 제고



■ 정책설계와 집행단계에서 정책수요자들이 자생하려는 의지보다는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지 않도록 자영업 정책 수립 및 추진 필요

- 실업대책 내지 생계안정의 차원에 역점을 두는 한 자영업 정책은 자생력을 높이는 데 한계를 갖게 되고, 생계형 창업촉진 → 자영업의 과잉심화 → 과잉 및 경기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 영세화·부실화 가속 및 퇴출애로에 따른 과잉구조 고착 등의 악순환 지속
- 과잉인 자영업 비중이 적정수준이 되려면 비자영업 부문으로부터의 인력유입 억제 및 비자영업 부문으로의 인력흡수 및 자영업 부문에서의 인력전출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정책의 병행 필요
- 이와 같이 자영업 부문의 문제는 자영업 고유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자영업 정책에 국한해보면, 생계형이 아닌 일자리 확대 가능형 자영업 창업 및 성장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을 강화

-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는 창업진단 및 창업준비 강화 등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하고, 창업 이후에 생계형에 머무르지 않도록 자기 부담 비율 상승으로 정책 실수요자에 대한 성장지원 정책을 추진
  - 경기부진에 따른 자영업 부문의 경영악화 완화를 위한 긴급성 자금투입은 사회의 안정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비경기적 여건에 대해서는 자제
  - 생계해결도 어려운 자영업자 문제 등과 같이 사회복지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는 사회 안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업종전환 및 사업 중단 이후 재취업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의 정책 관심 강화 필요
- 정책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수단과 전달체계를 진단하고 환류(feedback)를 거쳐 정책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
-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평가모델에 근거하여 개별 사업단위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통합관리 하여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나 방향설정에 활용

## 나. 주요 추진 방안

### (1) 경쟁력 강화

#### ■ 자영업 고객의 신뢰강화를 위한 제품 및 자체 서비스 보증제 강화

-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및 협회·상인회 등의 차원에서 친철가게에 대한 점포선정 확대 등을 통해 고객에 대한 신뢰유지 및 강화
  - (자영업 서비스보증제) 수익이 높은 점포의 경우는 친절서비스 업체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자체적인 서비스보증제 강화를 통해 자영업 부문의 경영성과 제고 필요

\* 매출증가 업체특성('13 전국 실태조사) : 친절서비스 강화 등 자구노력(72.3%), 시설개선을 통한 고객유치(6.5%), 신제품 출시(5.4%) 순으로 자구노력이 핵심

#### ■ 자영업 성장 동력 확충

- 혁신주도형 자영업자 유도 강화 및 고부가가치 분야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협업화 등 정책프로그램 확대
  - (자영업 기업가정신 확충) 생계형 위주의 자영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지식기반서비스업 활성화 및 소공특화 정책과 더불어 자영업자 혁신성 고양

\* 공단 및 센터 내 유망서비스업 및 소공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 자생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간접지원 강화
  - (SW 중심 지원 강화) 대중요법적 직접지원 개선을 위해 금융지원 위주에서 조직화·협업화, 정보화 등에 초점을 두고 컨설팅·교육 확충을 통해 자영업자 경영마인드 제고
  - (자금의 규모경제 실현) 금융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해 다수가 나누는 자금배분 방식에서 자생의지·성공 가능성 평가방식 강화로 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집중 강화
- 도시개발 정책과 연계된 전통시장 혁신과 새로운 쇼핑공간으로서 이미지 구축 지원 강화
  - (시장 지역 내 커뮤니티 기능 확산) 전통시장이 유통업의 집적단지라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이업종 공간이자 지역의 커뮤니티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
- 경영현대화사업 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정부주도 상권 활성화 제도에서 자력주도 상권관리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후 확산, 청년고객 유치전략 및 ICT 기반의 정보화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낙후성 이미지 탈피

#### ■ 자영업 활성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 협업컨설턴트·시장매니저 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서포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확충 및 내실화
  - (전문경영기법 원스톱 지원 방식 강화) 교육과 컨설팅, 조직화·협업화 등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1인 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지원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공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체계적 조직화 추진

#### ■ 자영업자의 능동적인 세계화 확산 지원

- 전통시장 글로벌 명품 시장화 및 명품 거리화 같은 정책 이외에도 내수 중심의 자영업 사업구조를 탈피, 세계화에 동참하는 자영업자가 배출될 수 있는 수익모델 개발
  - (해외시장 개척지원 강화) 해외진출을 꿈꾸는 자영업자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능동적인 세계화를 지원함으로써 세계화에서도 자생의지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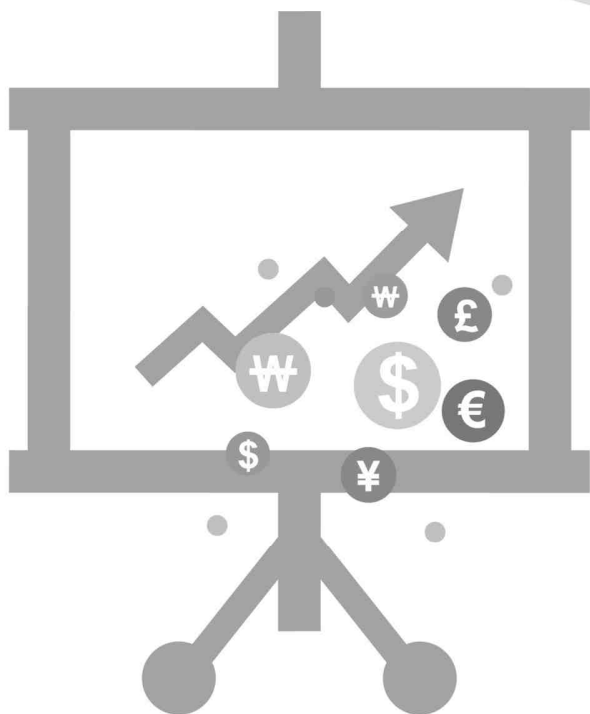
## (2) 자영업 생태계 정비

### ■ 쇠퇴기 이후 및 한계 자영업자의 연락처를 위한 구조개선 지원

- 쇠퇴기 이후 및 한계 자영업자 자발적 구조개선 지원 강화를 통한 자영업 생태계 정비 및 제도 확충
  - (자발적 퇴로지원 강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익을 얻는 경우는 일차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경영진단을 통한 대책 마련으로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그래도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 자발적 퇴로를 지원
- 폐업에 대비한 공제제도 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취업희망자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 (업종전환 지원 강화) 쇠퇴기 이후로 접어든 업종에 대해서는 자영업 부문의 업종고도화 차원에서 새로운 유망업종과 사양업종 정보확산 및 재기 여건 지원
- 권리금 회수 및 자영업자 취급제품 및 업종 유망분야 이외에 사양화 추세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 강화와 유희설비 처분 원활화를 위한 거래알선 지원 등
  - (범정부적 차원의 사회복지정책 강화) 업종전환 등 구조 개선을 통해서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별도로 사회복지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
- 생계해결도 어려운 자영업자 문제 등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는 현행의 자영업 정책에서 분리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
- 수혜대상 선정에 필요한 자영업자 소득수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예: 권리금 및 임차료 수준과 연계한 소득수준 파악 등)

토론

# 기업으로서 자영업에 대한 정책방향



주 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으로서 자영업에 대한 정책방향

주 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자영업과 자영업자의 개념 구분

- 자영업이란 개인기업(Individual Company, Sole Proprietorship), 즉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되는 가장 단순한 기업 유형을 의미
- 자영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 관련 논의에서 기업(=자영업)의 문제와 개인(=자영업자)의 문제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건강한 정책논의의 진전이 곤란한 경우 발생

## 2. 자영업 현황

### ■ 자영업 현황 파악의 어려움

- 자영업의 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 중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2013년에 65.4%에 불과하기 때문
  - 자영업자 중 사업자 등록 비율은 2007년 60.7%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비공식부문 혹은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

### ■ 공식통계로 본 자영업 현황

- 자영업에 관한 공식 통계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는 299만개(전체 사업체 대비 81.2%), 개인사업자는 538만명(전체 사업자 대비 88.8%), 자영업자는 565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22.1%) 등 다양하게 파악
  - 공식통계의 공통점은 자영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표 1〉 자영업 현황

개인사업체(2013)	개인사업자(2013)	자영업자(2014)
전국사업체조사	국세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299만개	538만명	565만명
전체 사업체 대비 81.2%	전체 사업자 대비 88.8%	전체 취업자 대비 22.1%

자료: 통계청, 국세청.

-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서 사업체가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자영업의 과잉 경쟁 및 수익률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
  - 예컨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가 한국은 13.5으로, 일본(5.6), 미국(2.1), 영국(2.7), 독일(3.2), 프랑스(3.9)에 비해 2.4~6.4배 과밀

〈표 2〉 주요 선진국의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산 업	한국 (2012년)	일본 (2012년)	미국 (2011년)	영국 (2012년)	독일 (2012년)	프랑스 (2012년)
제조업	7.2	3.9	0.9	4.3	3.2	3.4
도소매업	18.8	11.0	4.7	7.8	9.3	11.5
운수업	7.3	1.1	0.7	4.3	1.6	1.5
숙박음식점업	13.5	5.6	2.1	2.7	3.2	3.9
개인서비스업	7.9	4.0	2.3	4.1	3.0	4.3

자료: (한국) 통계청, (일본) 総務省・経済産業省, (미국) Census Bureau, (영국)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독일) Statistisches Bundesamt, (프랑스)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주: 한국에서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5대 산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기준,

- 주요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율(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미국 6.5%, 일본 8.8%, 독일 10.7%, 영국 14.2% 등이며, OECD 회원 34개국 평균은 14.9%
  -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의 경제적 비중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하락한 결과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
  - 이에 비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37.2%(1963년) → 33.8%(1983년) → 27.3%(2003년) → 22.5%(2013년)

### 3. 자영업에 대한 정책

#### ■ 자영업 및 자영업자 비중 하락 추세에 대한 대응방향

- 한국 경제에서 자영업 비중의 하락이 당분간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
- 자영업 및 자영업자 비중의 하락 경향을 역전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한 무리한 정책은 부적절
  - 자영업 비중의 하락은 경영자원의 상대적 부족에 따른 생산성 및 경쟁력 열위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거스르려는 시도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조정을 방해
- 자영업 활동의 급속한 위축은 실업을 양산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
  -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자영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영세 자영업의 과밀성을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의해 해소하려는 시도는 실업자 및 절대빈곤층 확대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킬 가능성
  - 자영업의 비중 하락과 과밀성 해소는 경제주체들이 시장수요에 순응하는 점진적 과정과 시간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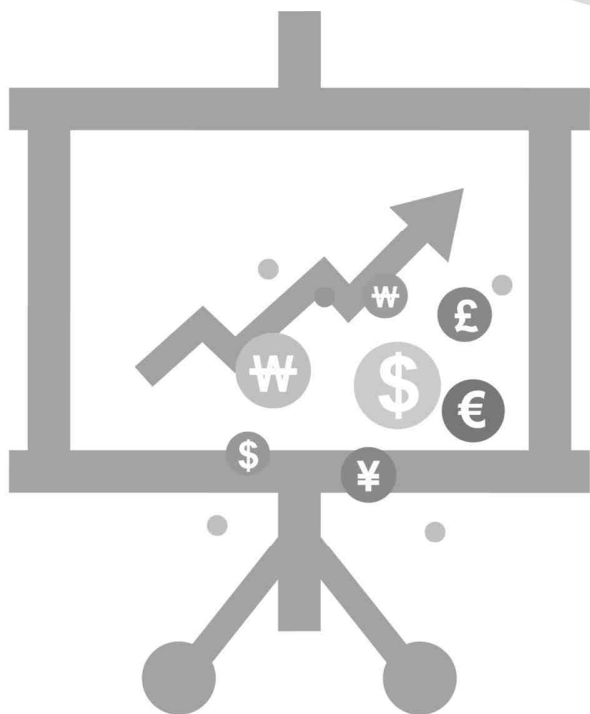
#### ■ 자영업 정책과 자영업자 정책의 구분

- 자영업 정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에 초점
  - 자영업은 기업으로서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 제고 필요
- 기존의 소상공인정책은 개인기업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토론

#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정책



이 병 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정책

이 병 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자영업자 대상 사회정책의 확충 필요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위험이 작다는 전통적인 생각은 2000년대 들어 영세 자영업 부분의 침체와 구조조정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또한 자영업 위축이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OECD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자영업 위축의 충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자영업 정책도 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산업정책이 중심이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토론은 한계 자영업자가 비대하고 임금노동시장으로 이동이 부진하다는 두 가지 현상에 주목하여 사회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영업 종사자는 빈곤층부터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지만, 그 상당수가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자영업자다. 현재는 근로빈곤 상태, 나이가 들면서는 노후 빈곤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한계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 위주로 발달한 사회보장제도 틀 안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자영업 부분의 수익성과 실질 소득 하락뿐만 아니라 동태적으로 사업 전환이나 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 따라 폐업과 비임금 일자리를 잃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근로 전환율은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청년과 고학력자에서도 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률이 높지 않다. 구조조정에 따라 이탈하는 비임금 노동력을 임금 노동시장에서 흡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임금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자영업자 대상의 사회보장제도 확대 방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에서 자영업자는 제도적으로 배제되거나 또는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자영업 종사자는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도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영업자를 지역가입자로 분류하여 적용하지만, 특히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납부 예외 문제가 심각하다. 공공부조에서는 취업상태 또는 종사상 지위와 무관하게 수급자를 선정하지만, 예산 제약을 이유로 수급자 규모를 적은 수준에서 통제되어 왔다. 개별급여체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욕구별 현물급여가 근로빈곤층에게도 확대될 전망이지만,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은 그다지 확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재의 제도 틀에서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가입자간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등의 조세기반적인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빈곤 문제 해결이나 사회서비스의 보편적인 확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제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보험 중심으로 발달해 온 우리의 제도 발전 경험에 비추어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는 사회보장의 낮은 수준으로 귀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후술하듯이 사회보험 적용은 공식 고용화를 촉진하는 부차적이지만, 의미있는 효과도 가질 것이다.

우선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산재로부터의 보호를 민간의 상해보험에 맡겨 두는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역선택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영업자의 전부 또는 재해률이 높은 자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산재보험 규정에 따르면,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임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14년말 17천명에 불과하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사업자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된 가입허용기간과 3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시 피보험자격 소멸 규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실업 위험을 스스로 통제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강제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드물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임의 가입을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실업부조를 운영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소득 지원을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료 미납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도 설계 당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근로장려세제가 2014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지급되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자영업자에게 두루누리 사업 확대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장려금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이 복지에 그치는 것에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즉, 근로장려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조세 또는 사회보험료 징수 당국에 소득이 드러나므로, 비공식 경제를 줄이게 될 것이다. 나아가 공식부문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조세정책의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를 폐지하고, 기장 의무를 조건으로 저소득 사업주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 3.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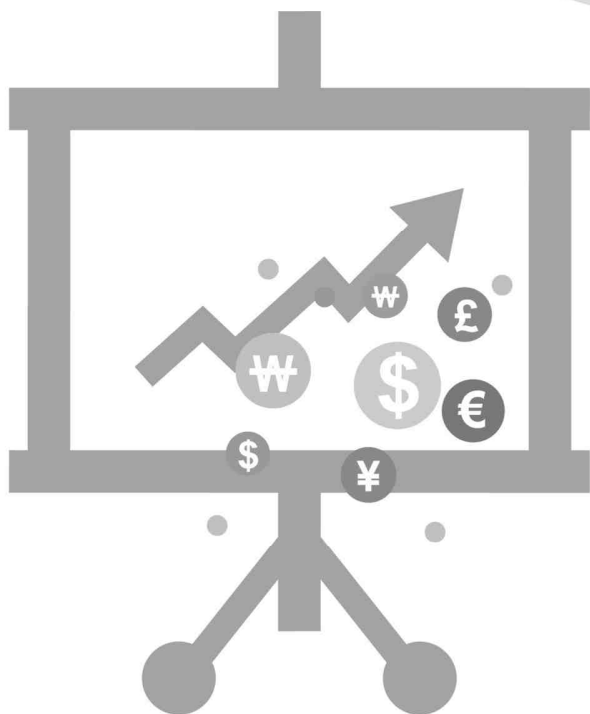
자영업자 문제는 과잉을 해소하는 경제정책적인 해결만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수익성이 악화되더라도 사업전환을 못하거나 퇴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임금 일자리로의 전환율이 낮으며, 임금근로로 전환하더라도 임금 수준이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개선되지 않았다. 임금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낮은 이유는 임금과 사회보험 측면에서 임금근로의 유인이 낮기 때문임

을 보여준다. 저임금 일자리의 인위적인 창출이 대안일 수 없으며,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의 효과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임금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은 청년과 고학력자 등의 임금근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에 대한 보상을 높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실효성 제고,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와 차별 시정, 근로기준법과 노동시간 단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론

# 소상공인들의 사회적경제 전환에 따른 정책간 연계도 제고 필요



이 은 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장





## 소상공인들의 사회적경제 전환에 따른 정책간 연계도 제고 필요

이 은 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장)

### ○ 소상공인들의 사회적경제로의 전환 = 사업자조합 형태의 일반협동조합

-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대다수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일해 온 비영리 시민사회단체나 취약계층 자활정책과 연동하여 설립되는 경향을 보여 옴. 이에 조직유형은 민·상법 상의 다양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복지·교육·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양적 성장을 해 옴
-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의 중심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지역내 일부 중소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움직임도 나타나나 비중과 지속성 면에서 약세를 보임
- 반면 2011년 12월 시행되기 시작한 협동조합기본법과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사회적경제계에 본격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진입(조직전환)이 가시화되기 시작함
- 이에 협동조합의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국과는 이례적으로, 협동조합중 소상공인조합의 비중이 65%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협동조합도시를 선언한 서울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바, 2014년 9월 기준 일반협동조합중 사업자협동조합 비중이 80%를 차지할 정도여서 소상공인들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의 조직 전환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표1〉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현황 (2014년 9월)

(단위 : 개소)

합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계	사업비	공간임대	중복지원	계	인증	예비	서울	부처			
2,235	105	85	32	12	399	219	115	33	32	241	1,481	61

## ○ 사업자협동조합의 등장배경 및 사례

- 사업자협동조합은 사업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들의 사업체 발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됨. 이에 개별 사업주의 부담이 되었던 원료 기계장비 등의 공동구입·공동물류·상품 및 서비스의 공동판매와 공동홍보·공동 브랜드 사용 및 품질관리·직원 교육 및 훈련시설 및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기타 보험 서비스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함 (2014, 장종익)
- 이러한 소사업자협동조합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골목경제 진출과 중소기업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관행 문제에 대응하는 소상공인들의 주체적 대응책으로 주목받거나 경제위기하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안정과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평가되는 등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동네빵네협동조합과 베이라협동조합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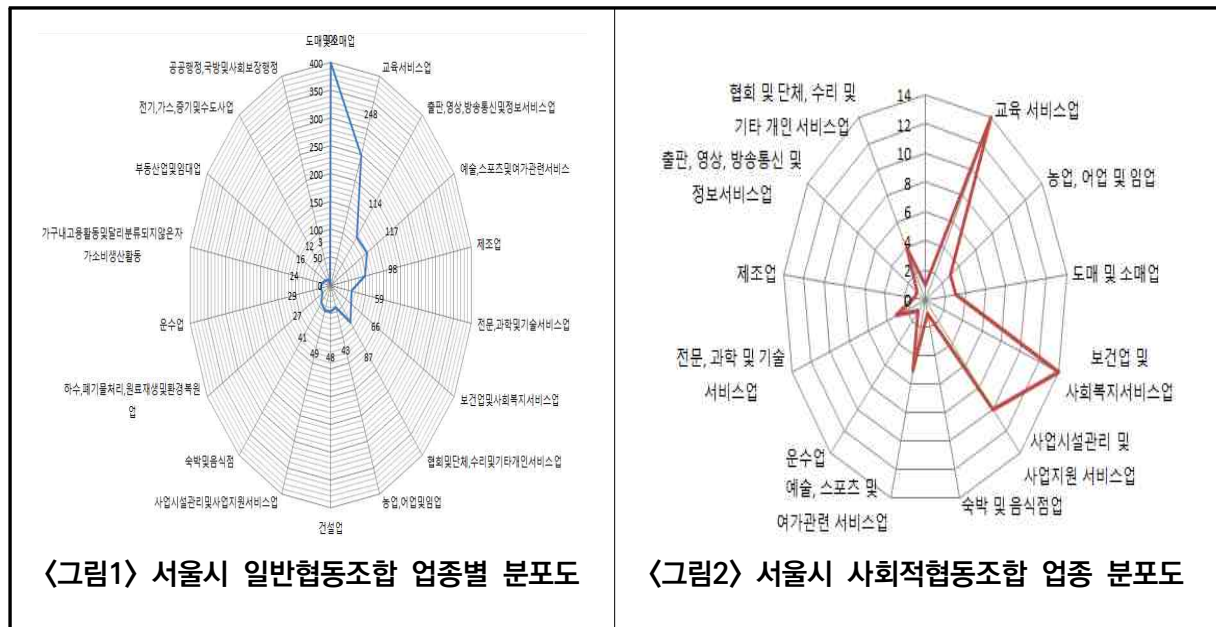
- 서대문/은평 지역 11개 동네빵집이 결성한 사업자 협동조합
- 공동출자 및 사업자조합 협업화 지원사업비를 이용해 베이커리 생지 및 인기 품목 완제품 생산 공장 설립, 운영
- 공장 경영역량 부족으로 초기 매출 부진, 적자 발생
- 연세대 사회적경제 동아리 '인액티스'에서 마케팅/생산관리 등 경영지원 & 협동조합 전문 컨설팅 등 지원
- '14년 10월 월별 손익결산 기준 흑자 전환. 외국인관광객 밀집 지역 소재 베이커리의 신규 조합원 가입 신청등 확산 가능성 보임



- 전국 33개 베이라 단독매장 운영주가 결성한 사업자 협동조합
- 베이라 도산후 매장 운영자들의 공동생존을 위한 협업
- 공동출자 및 사업자조합 협업화 지원사업비를 이용해 홍보 및 배송차량등 구입, 공동 물품구입 및 공동브랜드 판매 지속
- 담보없는 매장개설, 거품없는 가격, 매장의 재고부담 해소
- 반면 디자인 및 브랜드 경쟁력 유지 전략 보강이 과제

## ○ 사업자협동조합의 업종 분포

- 소사업자협동조합은 주로 유통·제조·서비스·운송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설립함. 이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들과는 주사업 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임



## ○ 사회적경제 지원정책만으로 사업자협동조합에 적합한 지원이 충분할 것인가?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본격화 하기 시작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비교해 볼 때, 지원 인프라 규모나 지원프로그램의 다양성 면에서 초보적 수준일 것임
- 중앙정부 지원재정의 70% 정도가 취약계층 고용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창업보육기관 지정 지원(사회적기업), 창업 사업비 지원(마을기업) 수준이고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직접적 재정지원이 부재함(기재부). 이외 시도별로 3~4인 규모로 설치된 통합지원기관을 운영중이며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정도가 이루어짐
- 한편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간 편차는 극심하나 서울·충남·강원을 시작으로 경기·제주·광주 등에서 별도의 지원사업들이 시행중임. 서울시의 경우, 2011년 하반기 박원순시장 재임을 계기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제안을 대폭 수렴하면서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의 협동경제 기반구축 및 민관거버넌스 실현, 커뮤니티 공유자산 형성을 주축으로 하는 생태계 조성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간접지원 정책들을 개발, 시행중임



〈그림3〉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 이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기반이 되어 지역내 전통산업 분야 소상공인들의 공유형 유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업화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함. 금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사업단 및 오르그닷 사회적기업의 주도로 지역내 12개 패션봉제업체의 공동 개발실 운영 및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국내외 청년디자이너 등과 일감연계를 돕는 온라인플랫폼을 운영중임. 성동 사회적경제사업단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으로 '성동의류패션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함



## 〈그림4〉 서울시 사회적경제

### 금천 지역브랜드 및 봉제개발실








- 패션봉제 생산자원 브랜드 사업
  - '금천제조' 지역 브랜드 개발완료
  - 패션봉제 관련 12개 네트워크 공장 확보
- 개발실 운영 및 일감연계 진행
  - 금천구 내 생산연계 10개소
  - 생산연계금액 195,000천원 달성

### 성동 패션봉제사업






-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 민관학 협동으로 '성동의류패션기술지원센터' 설치
  - 한양여대에서 공간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성동구청에서 운영비 일부 지원
  -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 소상공인 협업 사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제도에 국한할 경우, 다양한 업종에서 출발한 사업자협동조합들에게 적합한 기술지원·판로지원·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할 자원은 절대 부족한 상황임

## ○ 제언

-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제시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견인 지속
- 정부 부처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내 공공 인프라 간에 각기 보유한 정책수단 및 자원의 공유 제고
  - 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 사회적경제 할당제 도입, 업종별/권역별 공유형 사업 기반 조성

예) 사업자조합 경영지원 전문가 공동 양성 및 인력 교류

- 정부 지원정책의 이력관리 및 시너지 제고를 위한 연계 강화

예시)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간 연계도



- 경쟁력있는 소상공업의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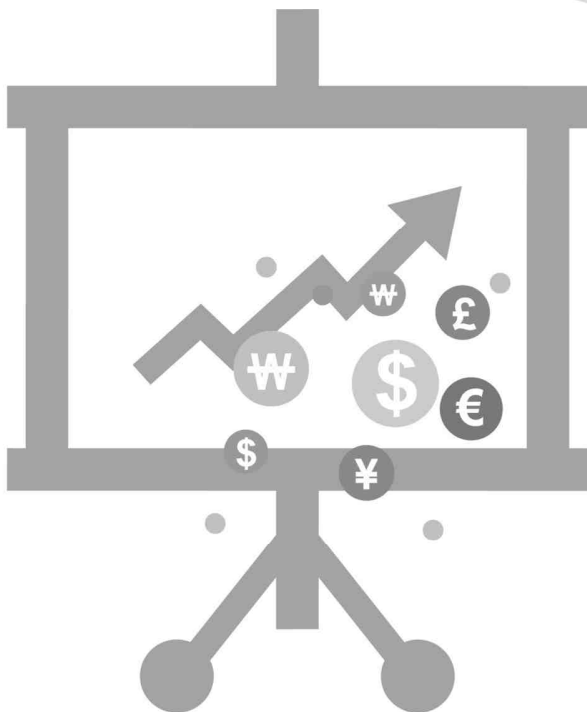
- 정책의 혁신과 사업자의 자기혁신이 병행되어야 함

예) 전통시장 상인이 지속적 재정지원의 대상인가? 커뮤니티 기여도를 보강해야 하는 자기혁신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는가?

토론

# 서민경제의 부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기존 정책의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



양 창 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기존 정책의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

양 창 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 1. 자영업자 정책의 요약

### (1) 자영업자 정책의 내용

- 자금, 교육·컨설팅, 상권정보제공 등 지원정책에서 장년층 고용안정정책,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등 구조적 문제해결 정책으로 확대.
- 자금 융자 등 직접 지원에서 시설개선, 교육·컨설팅 등 간접 지원 육성책으로 확대

### (2)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

- 지원정책에서 구조적 문제해결 정책으로 확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방향.
- 지원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대하려는 방향도 바람직.
- 최근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과거 정책의 한계를 드러냄.

## 2. 구조적 문제해결 정책 방향의 한계 및 방향

### (1) 한계

- 자영업자 정책 중 구조적 문제해결 정책방향은 과당경쟁 문제해결이나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 국가 전체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의 내부적 구조 또는 신규진입의 특성만을 분석하고

제시한 정책.

- 자영업자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 필요성, 계층적 중요성이나 비중 등을 간과. 그 결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도 과거 지원 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드러냄.

## (2) 자영업자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1996 ~ 2013 22.5% ~ 29%로, OECD 평균인 약 15% 내외를 크게 상회<sup>1)</sup>
-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과 ‘자영업자’를 혼용하거나 두 개념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 초래. 이에 대해 ‘자영업이란 개인기업(Individual Company, Sole Proprietorship), 즉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되는 가장 단순한 기업 유형을 의미한다. 자영업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자영업)의 문제와 개인(=자영업자)의 문제가 뒤섞여서 나타나곤 한다’는 의견 있음<sup>2)</sup>.
- 그러나 자영업 또는 자영업자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혼용은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
-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법규정은 없음.
-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라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
- 통계청 2013. 6. 21.자 보도자료 ‘가계금융 복지조사로 본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 및 특징’ 의하면 자영업자 가구 중 78.5%(농림어업 포함)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 58.4%, 도소매업 74.9%, 운수업 94.9%, 음식숙박업 56.4%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로 나타남.

1) 산업경제연구원, 2014. 10. ‘자영업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참조

2) 산업경제연구원, 2014. 10. ‘자영업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참조

### (3) 정책방향

- 자영업자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자영업자는 특정 계층으로 인식하는 정책 필요.
- 자영업자 개인을 살리는 정책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사회 계층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과 정책 필요. 따라서 자영업자 정책은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이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개인에 대한 시혜적 정책이 아님.
- 자영업자의 위기는 과당경쟁, 퇴로나 전환의 기회 부족이라는 문제 외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과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방치하는 시장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자영업자 영역 진출에 대한 제지 필요.
-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 05. 23.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①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7. 05.부터 2011. 04.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총 652개 중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92개로 76%에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② 대기업들 중 ‘생계형 서비스업’ 즉, 음식·숙박·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에도 대거 진출한 것으로 분석.
- 자영업자 가구를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업종별 고용원 비율, 자산보유 정도나 부채율이 차이가 크게 나타남. 특히, 제조업(=소공인)과 다른 자영업(=소상인)은 업종의 특성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도 업종별로 달리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3. 지원 정책 방향의 한계 및 방향

### (1) 한계

- 지원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자금지원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구조에서 보더라도 융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교육·컨설팅, 시설개선사업지원, 물류센테지원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끊임없이 이어져 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해소연은 이어지고 있음.

## (2) 정책방향

- 지원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본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치 없이 지원정책에만 집중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
- 최근 고용시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출에서 보듯이 자영업자 계층은 고용시장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지탱하는 또 다른 사회적 안전망으로 역할.
- 반면,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취약.
- 임금노동자들은 실직했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당장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했으나 2013년 12월 기준 가입자는 1만7908명에 불과하고, 전체 자영업자 565만명의 0.3% 수준. 현재 자영업자 보험료율은 소득의 2.25%로 임금노동자 보험료율 0.65%의 3.5배<sup>3)</sup>.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정책 필요.
- 2013년 기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67.9%.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는 80.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3.2%만이 국민연금에 가입.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노후에 빈곤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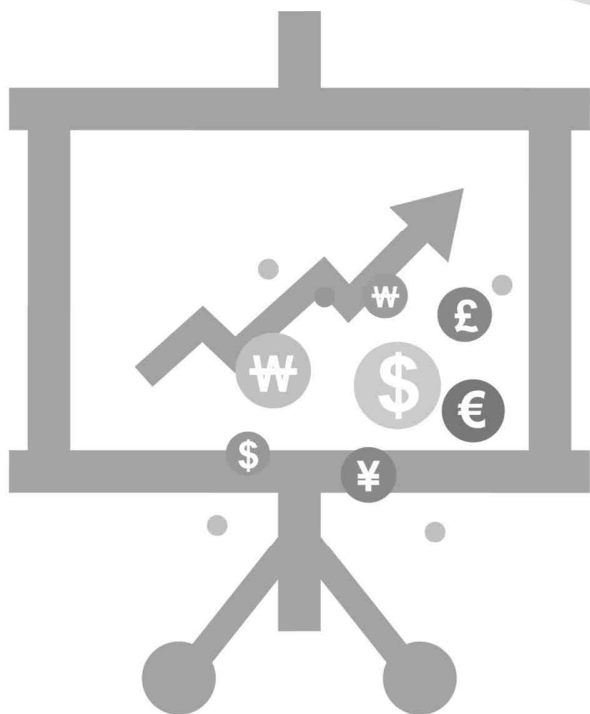
---

3) 한겨레신문 2014. 7. 20.자 기사 ‘자영업자들 문닫으면 당장 생계 막막, 구명난 안전망’ 참조



토론

# 2015년 소상공인정책



**이 상 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 2015년 소상공인정책

이 상 훈 (중고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 2015년 소상공인정책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은 “민생경제의 근간\*”으로서, 내수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고객

\* 전체 취업자의 21.9% (568만명, '14.11),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시 26.5% (689만명)

- 그간 조직·법률·예산 등에 걸쳐 종합적으로 완비된 소상공인정책 지원체계\*의 토대를 구축

\* 소상공인진흥공단('14.1), 소공인특별법('14.5), 소상공인진흥기금('15. 2조원) 등

-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구조적 애로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집중 육성

#### 1

####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생업 안전망 확충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과잉 창업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창업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 분산 지원

### 1. 과잉진입 예방 및 준비된 창업 유도

#### 가. 상권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

-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에 대해 창업 전 성공·실패 가능성 판단이 용이하도록 창업과밀지수\*와 과잉진입 경고등 표시('15.1~)

\* 소비수준,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시에 예상되는 매출전망 등을 종합지수화 하여 A(안전), B(주의), C(위험), D(고위험) 등급으로 표시

- 창업하려는 점포의 개·폐업 이력 및 예상 매출액 등을 분석·제공하는 ‘점포 이력·평가 서비스’ 전국 확대\*

\* (기존) 서울 지역 음식점 → (확대) 전국 음식점 및 소매점

## 나.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현장 중심 창업교육

- 틈새시장 공략 등을 위한 신사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확대

\* 사업화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최대 25백만원) / (‘14) 15건 → (‘15) 60건

-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수준별·대상별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규모 : (‘14) 4,000명 → (‘15) 4,500명

구 분	지원내용	주 관	규 모
예비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적성검사를 거쳐 소수정예 선발</li> <li>• 교육(150시간), 점포체험(3개월), 정책자금 연계</li> </ul>	소상공인 사관학교	300명
특화형·비생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실습 지원</li> <li>• 자금 연계(최대 7천만원 한도, 금리 3.36%)</li> </ul>	창업학교(민간기관)	4,000명
해외창업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시장보다 경쟁이 덜한 신흥개도국 진출 지원</li> <li>• 국내교육(60시간) 및 해외교육(100시간) 제공</li> </ul>	창업학교(민간기관)	200명

## 2. 재기 지원 및 생업 안전망 확충

-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에게 「교육-멘토링-정책자금」을 연계지원(15. 1천명)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컨설팅, 취업훈련 및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도입(15. 1만명)

1단계(중기청)	2단계(고용부)	3단계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취업상담, 직무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	전환대출 용자(중기청) 취업성공수당(고용부)

- 소상공인의 고령화(만 60세 이상) 또는 폐업 시 지급하는 ‘소상공인 공제’ 조성규모 확대(‘14. 2.6 → ‘15. 3.5조원)

- 경쟁력 있는 소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성과중심으로 재편

## 1. 소상공인 혁신역량 제고

### 가.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집적화 및 지원체계 확충

- 소공인 창조·혁신 지원의 거점이 되는 문래동식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확대 설치·운영

\* 설치계획 : ('14) 8 → ('15) 25개



사 례

- **문래동 철공소 골목** :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대 개소('14.11)하여 문화예술 접목, 대기업 협업을 통한 '문래동식 창조경제 모델' 제시



- 앱(App) 기반 「온라인 소공인 제품 수·발주 시스템」 개발('15.12) 및 집적지 내에 공동판매장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 구축('15. 5개소)

- 『도시형소공인법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15.5)하고, 「소공인 종합지원 5개년계획」 수립('15.12)을 통해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 나. 민간주도의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

-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상권을 개발·관리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상권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15.하)

\* 상권운영조합 설립, 자율상권구역 지정·신청, 구역 내 규제 특례 등

- '규모의 한계'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공동사업 지원 확대('14. 400 → '15. 528개)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상인협동조합' 설립 촉진('15. 80개)

사 례

- **완도매생이조합** : 청년상인 6명이 설립, 정부 공동장비 지원을 받아, 조합설립 前 대비 매출액 4.5배 증가 및 18명의 고용 창출



## 2.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및 교육·컨설팅 지원

-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14. 9,150 → '15. 1조 4,970억원)하고, 창업 - 성장 - 사업전환 등 생애주기별 세부자금 운용

주 기	세부 자금	소 계
창 업	• 소상공인창업자금 (2,270)	2,270억원
성 장	• 일반경영안정자금 (3,500) • 긴급영업안정자금 (300) • 소공인특화자금 (3,500) • 전환대출자금 (5,000)	1조 2,300억원
폐업/전환	• 사업전환자금 (200) • 임차보증금안심금융 (200)	400억원

-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특화교육('15. 1.8만명) 및 상품개발, 마케팅, 고객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15. 3,700건) 실시

### 나.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

- (물류센터) 중기 유통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면적 사업개편을 추진하고, 사업개편 전까지 신규건립 지원 잠정 중단
- (나들가게) 상품공급사를 확대·선정하여 경쟁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를 유도하고, 점주 선택형 컨설팅 지원 확대('14. 1.5 → '15. 3천개)
- (정보 앱)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앱(4개\*)을 '표준 앱'으로 통합('15.3)

\* 소상공인 지원 알리미, 소상공인 방송 yes-tv, 상권정보 앱, 매력 넘치는 우리시장

-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발굴·브랜드화 하고, ICT 접목 등을 통해 고객편의 제고

## 1. 전통시장별 특성화 개발

### 가. 시장별 특성화 지원 및 전통시장과 청년 활기 결합

- 전통시장을 3대 유형 (① 골목, ② 문화관광, ③ 글로벌 명품)으로 차별화하고, '17년까지 375개 특성화 시장 육성

전통시장 유형별 특성화 지원계획

시장 유형	특성화 내용	육성계획		'15년 예산
		'15	'17	
골목형	• 마케팅 · 상품진열 · 요리전문가를 투입하여 “1시장 1특색”을 개발하고 대표 브랜드로 육성	70개	200개	210억원
문화관광형	• 예술공방 · 도서관 등 시장에 작은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지역 예술인 · 주변 관광지 등 연계	87개	165개	249억원
글로벌명품	• K-pop 이벤테, 명품거리 조성 등 한류와 연계한 명품시장 육성	5개	10개	50억원

-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및 영업공간자금 등 지원 (15. 51억원, 100명)

#### 사 례

-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 청년창업과 문화 마케팅을 결합한 복합문화 쇼핑몰(청년점포 24개 입점) → 입소문과 청년층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활기 회복



## 나. 대기업·대학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한 특성화 지원

- 정부·지자체와 해당 지역 대기업이 **공동자금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자량거리 (대표상품, 서비스디자인 등) **개발 지원**
  - \* 특성화 시장 선정 전후 지자체, 대기업과의 협업계획 제출시 세부사업 지원에 반영
  - (사례) 강원도 봉평시장 : 강원도, 현대카드·현대캐피탈과 공동으로 재원 조성
- **대학생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경영혁신 촉진** (‘15. 20개 시장 - 대학) 및 **예능계 학생의 재능기부** (100개 대학)를 통한 **특성화 지원**

## 2. 고객편의 제고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 가. 고객 편의시설·주차장 확충 및 ICT 접목

- 노후시설 개선, 아케이드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 (303개 시장) 및 주차장 설치, 주차장 이용 지원 등 **주차환경 개선** (145개 시장)
- 상품·고객관리에 태블릿 PC 활용, Wi-Fi 구역 설치, 모바일·온라인 상인교육, ICT카페 등 전통시장에 **ICT 접목을 강화** (‘15. 130개 시장)
  -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시장상품 검색 → 주문 → 배송 → 카드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 (‘15. 1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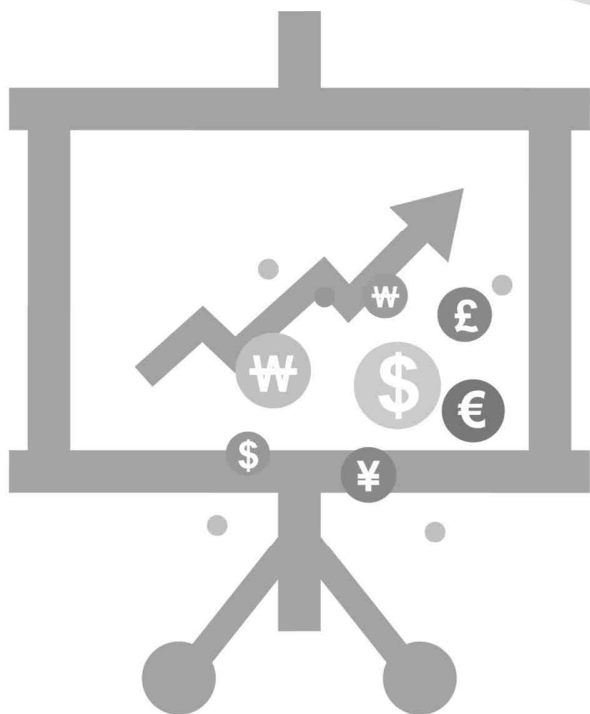
### 나.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및 부정유통 방지

-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해, 기업 및 정부의 구매 확대 유도, 개인 구매시 할인율 (5%) 유지 등 추진
  - \* 온누리상품권 구매목표 : (‘14) 3,600 → (‘15) 4,000억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R&D지원 등) 참여시 우대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백만누리 (1개 기업이 1백만원 이상 구매)” 운동 확산
-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 (‘15.3, 온누리상품권 운영요령 개정)



토론

# 박근혜정부의 자영업 정책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동 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박근혜정부의 자영업 정책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동 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1. 무분별한 규제완화 속에 실종된 경제민주화? 서민경제?

- 자영업의 위기 예견된 정부정책의 실패 ..

2010년 이후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자영업시장 진출

- 위기 징후 : 창업이 쉬운 대기업 프랜차이즈/ 외식업등 과밀생계형 업종에 집중
- 2012년부터 편의점등 프랜차이즈 갑을 불공정 계약과 시장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심화
- 소위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들은 3중고 (부채+월세+경기불황)

-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정부 규제 대책

-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등)들은 다양한 신업태진출로 시장점유율 증대  
대형마트(창고형할인매장) → 중대형 SSM → 중소형 SSM → 상품공급점
- 대형마트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 (과거 허가제 유지하다 WTO GATS 협정이후 폐지)
- 의무휴업 논란 재점화 시도 (14년 12월 고등법원 판결)
-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간 상권 보호 구간 고시 폐지
- 산업통상자원부의 복합쇼핑몰,상품공급사업등 대기업들의 신유통업지원에 관한 유통산업발전 5개년계획
- 동반위의 상생협약으로 포장한 동반살생 태도  
전통택주, 문구소매업, LED 등
- 대리점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등 중요 중소기업 보호 법안 난항

## 2. 정부의 경쟁력제고 활성화 대책 과연 ??

- 소수 경쟁력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 시장퇴출 정책 추진
- 한정된 예산 집행을 위해 선택과 집중 ( 84.91%가 융자사업 )
-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선행
- 700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정책
- 지역시민단체(주민단체 NGO)+중소상인 자영업자+지자체등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지역 경제 생태계 운동  
예) 지역화폐, 상가마을공동체
- 관(행정) 주도의 전통시장 하드웨어지원 보다는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콘텐츠 지원 방식으로 전환  
서울의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 및 시장지원센터 건립등(상인+지역주민+민간전문가의 컨설팅 및 기획단 운영)
- 대형유통업체들의 규모의 바잉파워(시장독점)VS 중소도매업 조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중소소매업과 중소제조업 동반성장 전략
  - 통합물류센타 혹은 물류단지등 시범사업 실시 (중소 도매업+ 중소소매업 공동이용)
  - 기존 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법)도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참여
-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위기구제 시스템 마련 (갑질신고센터)

## 3. 중소기업(대표적 중산층)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

- 중소기업 문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 없는 일회성 이벤트 정책으로는 안 됨
- 중장기적 안목(3년 계획, 10년 전망)을 가지고 꾸준히 접근해야 함
- 번지 없는 정책, 조직화 되지 않는 대상 등 밀빠진 독의 물 붓기 식 지양
-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협동조합간의 연대와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  
(지산지소 地產地消)

# Memo



# Memo



# Memo



# Memo





# Memo



# Memo

